

김윤덕 국토부장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 발표

향후 5년 정책방향 담았다

안전기준 정비·안전인력 확충·AI 보안 판독 도입 추진

국가 공역 구조 조정·KASS 활용 위치정보 서비스 고도화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10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안전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각 시설 정비,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위험요인 제거에 집중한다. 디지털 기반의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항 인프라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항공안전 데이터를 활용해 AI·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방형 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하고 국제 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안전인력 확충, AI 보안 판독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별 안전투자 확대와 자율보고 활성화로 업계 내부 안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전문화도 강화하면서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 체계도 갖추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급증하는 항공수요·UAM 시대 대비해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5호기를 활용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전성을 높인다.

여객·기업 수요를 반영해 신규 운수권 확보도 지속 확대하고 지방공항 전문 운수권 확보, 외국인 관광객 거

치와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공항 간 연결 강화, 인천공항 환승축 확대 등 네트워크 확장 전략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도 추진하는 가운데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항공정비(MRO) 산업 등교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임금 못받고 강제출국… 더는 국가의 부끄러움 대선 안돼”

민주 이성운 의원, 체불임금 피해 이주노동자 보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10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임금 피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7주년을 맞아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세계 인권의 날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강제 출국의 두려움 속에 떠돌아다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급 대안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성운 의원

그는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는 동안 행정관청에 거주지를 신고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 인권 침해 없이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형 소상공·자영업자 매출 3배 프로젝트 추진할 것”

‘익산시장 출마’ 최병관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1조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체계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변화 속에서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짧은 익산 다음 만들기 포럼 대표)는 익산의 경제 상황을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생활경제의 구조적 붕괴’라고 진단하며, 10일 ‘익산형 소상공·자영업자 매출 3배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최병관 전 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재직 당시 지역화폐 제도와 법령 설계를 했고,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서 지역화폐 국비·지방비 배분체계, 지역경제 회복 예산을 책임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익산형 매출 3배 프로젝트’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지사는 “지금 익산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단순한 불경기라 아니라 생활경제의 뿌리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라며, “상권 붕괴·자영업자 감소·공실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도시의 개별 지원책으로는 버틸 수 없다.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최 전 부지사가 제시한 ‘익산형 매출 3배 프로젝트’는 지역화폐·금융·상권·공실·야간경제·공공구매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 익산의 생활경제를 통째로 재설계하는 구조개혁 패키지다.

첫째, 상권별·목적별 맞춤형 접근을 통해 도시 소비 흐름을 직접 설계한다. 원도심, 역세권, 전통시장, 청년문화상권 등 회복이 시급한 지역을 집중 지원하고, 청년·신혼·고령층·육아·교육 등 목적형 소비를 구조적으로 유도해 침체 상권 매출을 20~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둘째, 고금리 대출에 묶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익산형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연 300~400만 원의 금융비용을 바로 절감한다.

셋째, 공공·민간 리츠가 참여하는 ‘도심 공실 혁신 펀드’를 통해 공실을 매입·리모델링하고 반값 임대 상생



최병관 전 행정부지사

점포로 공급해 도심 공실률을 실질적으로 낮춘다.

넷째, 월 2회 운영하는 ‘짬짬이’ 상설 야간경제 프로그램을 통해 익산의 밤 소비를 살리고, 마루사자·왕궁리·익산역을 잇는 야간 관광 루트를 구축한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행사비·급식비·회의비 등을 지역 점포와 사전 계약하는 ‘선결제 상시화 정책’으로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고정매출을 제공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노후 용·배수로 피해 개선책 마련해야”

정읍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현안 점검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9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적극적인 개선과 대응을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도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사항의 시정 반영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시정질문 이후 후속조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의견 연구단체 활동을 통한 정책 제안의 시정 반영 여부 등을 질의했다.

이복령 의원(사진)은 △최근 4년간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 △노후 용·배수로로 인한 피해 개선 대책 △내장산 해동관광호텔 사업 지연 사유와 공공성 훼손 시의 이행 검증 계획 등을 질문했고, 서항경 의원은 △용호마을 버스승강장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 방안 △공공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대책 △화물물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공공시설 B7기오스 크 개선방안 △정읍지하철·쌍화차 축제의 발전방향 △야생동물 피해 대응



정읍시의회

체계 구축 방안을 질문하며 시정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5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 뒤 폐회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바다서 열린 땅, 새만금에 활력 모인다

전북자치도, 내년 새만금 국가예산 9855억원 확보

항만 등 신규사업 대거 포함… 미래성장 동력 확보



새만금 전경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새만금 분야 국가예산으로 35개 사업, 총 9,855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1조1,785억 원보다 1,930억 원 줄어든 규모이지만,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새만금 신규사업 반영과 핵심 사업 예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예산 확보로 새만금은 2025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2026년 신항만 '개항', 2027년 수목원 '개장'이라는 연속적인 사업 완료 흐름에 들어서며 교통·물류 접근성 개선과 관광·기업 유입 효과가 동시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새만금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항만, 메가센드박스, 수질개선, 내부개발, 미래기반 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가 균형 있게 반영되며 향후 총사업비 기준 약 2조 3,812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만금 개발이 단일 분야 중심이 아닌 전 영역으로 확장되는 '본격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도 진전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메가센드박스 1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 헬프산업 클러스터 구축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이를 통해 헬프 산업 기반 기술 확보는 물론,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신산업 테스트베드로서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

련해 오는 15일에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메가센드박스·1호 헬프산업 추진상황 공유 회의'를 열어 실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예정된 새만금 신항만 2선식 개항을 위해 765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이 중 705억 원은 신항만 1·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여기에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항로 준설 사업과 관광선 건조 예산이 각각 10억 원, 37억원 배정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외해역 해양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비 약 3억6,000만원이 신규 책정됐다. 새만금 방조제 개발로 기존 어항을 대체하는 가덕항에 대한 추가 개발비 9억 원도 포함돼 어민 정주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수질 관련 사업도 본격화되며, 내부개발 및 서해안 물류거점 구축 사업도 속도를 낸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기반 집적화를 위한 복합단지 연구용역비 3억 원과 조사료 종자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2억 원 등이 편성됐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대규모 SOC사업 종료로 예산 총액이 줄어든 점은 아쉽지만, 다양한 신규사업이 포함되며 새만금 개발의 성격이 '간척 기반 구축'에서 '정착·산업·공간 혁신' 단계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전기였다"라며 "신항만 개항과 공항 건설, 정주환경 조성 등 핵심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17개 현안, 국회서 추가 반영

민주 호남발전특위…이원택 의원 “새로운 도약 이룰 것”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 17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05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원택 국회의원(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은 10일 성과보고회를 통해 “전북의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호남발전특위는 지난 9·11월 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함한 전북 핵심사업 49개를 당 지도부에 보고하며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 의원은 “내발적 성장 전략을 통해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반영 사업은 △미래전략산업 △지역 SOC · 도시인프라 △문

화·관광·지역복원 등 3대 분야로 구성된다.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구축, 시설농업 AI로 밭 실증,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개발,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조성 등 AI·바이오·우주산업 기반이 강화됐다. 농업기계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축도 반영돼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SOC · 도시인프라 분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637억원 증액돼 기존 순창에 더해 장수군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 확충 등 생활·산업 인프라 지원도 이뤄졌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 남원 도자전시관,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덕유산 생태탐방원, 국립모두예술컬플렉스 등이 추가 반영돼 전북의 문화자원과 생태관광 기반이 확장됐다. 또한 의료용 헬프산업 클러스터, 첨단정밀육종 기반,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등 농업·생명 산업 분야도 다수 반영되며 지역 산업의 외연이 넓어졌다.

이 의원은 “예산 확보에 함께 힘써준 민주당 지도부와 예결위에 감사린다”며 “이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전북의 더 강한 도약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 단계 증액된 17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8,596억원, 이 중 국비 1조8,4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규모에는 순창·장수 등 농어촌기본소득 10개 시범지역의 5,850억원도 포함된다.

/이만호 기자

‘고향 장수에 대한 애정, 독자들과 나누다’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20일 한누리전당서 출판기념회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20일 한누리전당서 출판기념회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 20일 한누리전당서 출판기념회

한 열린 행사로 기획했다”며 “고향 장수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간 ‘장수를 사랑해, 장수애 미친 남자’는 제목 그대로 저자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인 ‘장수’를 중심으로 돈다. 양 전 의원은 고향 장수군에서 자라며 품었던 따뜻한 유년의 기억부터 정치에 뛰어들기까지의 과정을 수채화 같은 문체로 풀어냈다.

책에는 장수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그가 고민해온 정책적 구상과 미래 비전도 함께 실렸다. 특히 전국 최초의 제안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상과 추진 과정, 제도가 정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가감 없이 기록해, 지역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 전 의원은 “이번 북콘서트가 장수군민의 생각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 장수=고관호 기자